

낙태허용 사유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이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유 계 숙(경희대학교 교수)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인공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업이나 직장 등의 활동으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미혼 여성의 낙태는 2008년 13.9건에서 2009년 12.7건으로 낮아지다 지난 해 14.1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고졸 이하 여성의 낙태가 전체의 47.4%에 해당하며, 여대생의 낙태율은 2009년 인구 1000명당 3.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최근 미혼 여학생들의 낙태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낙태예방 대책이 미흡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232명의 미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낙태허용 사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인식이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사용된 측정도구는 '낙태허용 사유 인식척도'(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사유로 인한 낙태에 허용적인 태도를 의미)와 '낙태예방정책 요구도 척도'(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 $\alpha=.82$)이다. 미혼 여학생 232명이 인식하는 낙태허용 사유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14 문항의 낙태허용 사유 인식척도를 주성분분석한 결과, 모자보건법상 사유, 사회경제적 사유, 규범적 결격사유 3가지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설명변량 56.62%). 또한 여학생들이 인식하는 3가지 사유별 낙태허용성과 3가지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여학생들은 모자보건법상 사유로 낙태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허용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규범적 결격사유 때문에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부 정책에 대해서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 불법낙태 관련법체계 및 낙태숙려제도,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끝으로 여학생이 인식하는 각 사유별 낙태허용성이 낙태예방을 위한 3가지 정책에 대한 요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소속학교 집단, 성관계경험 유무, 학업성적, 가구소득, 종교 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하고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규범적 결격사유로 인한 낙태는 허용하는 여학생일수록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허용적이지 않은 여학생일수록 불법낙태 관련법체계 및 낙태숙려제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규범적 결격사유와 모자보건법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여학생일수록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여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향후 낙태예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현재 증가세에 있는 미혼 여학생들의 낙태율을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